

전통문화산업 육성 진흥 정책 모색

전주시·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북권 토론회 진행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이하 전당)은 지난달 31일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북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대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달 31일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전통문화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북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도 펼쳐졌다.

이와 관련 시행을 앞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형 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는 정부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법 제정과 정책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시각에서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져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집중호우 대비 자원봉사자 교육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여름철 앞두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나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센터 직원과 전주시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이 다양한 재난 사례 및 자원봉사 복구활동 사례를 알아보고, 자원봉사 조직관리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봉사단체들은 향후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급식 활동 및 구호 활동 △재난지역 교통정리 활동 △집수 가족 가재도구 정리·도배·빨래 봉사 △침수 농가 재건 활동 등 분야별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들 봉사단체들은 평상시 정기적으로 각 분야별 활동을 진행하며 재난안전 교육 등을 통해 재난에 대비할 예정으로,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 봉사자 관리 및 복구활동 등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최이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재난은 사전 예방과 준비가 중요하다"면서 "재난·재해와 관련해 분야별 전문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일반인 등도 봉사단을 구성하고, 사전 재난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재난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권역별 토론회는 이날 전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두 달간 경상권과 강원권, 충청권, 서울 등 전국에서 진행된다.

이날 전북권 토론회에서는 먼저 유동환 건국대학교 유동환 교수가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전통문화산업 흥부와 문화유산활용의 미래'를 주제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회고하며, 인

프라와 법제도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 소장은 '글로벌 한식문화관광의 혁신적 도약'을 주제로 전북권 한식문화산업 대응 과제와 전통문화산업의 현재, 나아갈 방향 등을 함께 제시했

다.

발제에 이어 '새로운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 정책'을 주제로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과 박금희 전주시 문화유산과장, 문윤걸

전주 관광산업, 북미시장 진출 시작점 마련

전주시의회, JFK TRAVEL·에이스 여행사 간담회·업무협약 체결... 전주 체류형 여행상품 판매



전주시시설공단, 장애인 대상 인라인 무료 강습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라인롤스케이팅 무료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두드림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센터 장애인 10여 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29일까지 이틀간 자체 연습을 시작으로 걷기와 밀기 등 기본적인 동작 등에 대한 강습을 진행했다.

강사 자격을 갖춘 공단 직원이 재능 기부 방식으로 강습을 실시했다. 공단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초청해 무료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까지 이틀간 이용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가 전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뉴욕 및 뉴저지 등 해외 동포 여행사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6월 말부터 장기체류형 여행상품을 본격 판매하고, 하반기 관광객 400여 명이 전주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공무국의출장단(단장 송영진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 KCC에서 미국 동부지역 여행사인 JFK TRAVEL, 에이스여행사 관계자들과 관광, 숙박, 의료를 결합한 여행 상품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출장단은 미국 시장에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알리고, 전주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주시의회와 미국 동부지역 여행사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상품 개발 지원, 미주 지역 재외동포 대상 전주시 홍보를 위한 정기적 교류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8월 이후 장기체류형 관광객이 전주에서 머물며 주변도시까지 여행을 즐길 계획이다. 향후 전주시는 북미시장 전담여행사 협력네트



전주시의회 공무국의출장단은 지난 5월 27일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 KCC에서 미국 동부지역 여행사인 JFK TRAVEL, 에이스여행사 관계자들과 관광, 숙박, 의료를 결합한 여행 상품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워크를 뉴욕, 뉴저지주에서 남부지역인 아틀란타, 달라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송영진 단장은 "지난해 공무국의출장장을 통해 꾸무필름스튜디오 건립 성과를 이끌어 냈다면, 올해는 전주 관광산업이 북미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시작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한복, 한식, 한지 등 다양한 한문화 콘텐츠와 의료관광 등을 결합해 재외동포 및 외국인 MZ세대 관광객들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공무국의출장단 일행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미국 동·서부 지역에서 전주시 홍보와 국제 협력 관계 구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원들은 영화·영상산업, 마이스산업, 야간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전주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동차 사고 없는 전주한옥마을 만들기 추진

전주시, 전동차 업체·이용자 대상 안전모 착용 등 캠페인 실시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완산경찰서 교통과, 한옥마을 주민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경 합동 전동차 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한옥마을 내 전동차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시는 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주민과 한옥마을 내 주요 거점에서 전동차 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 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전동차 대어업체를 찾아 안전 수칙 준수 홍보문과 전동차 통행안내지도 배부하고, 전동차 대어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및 안전모 대어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로 인한 통행 지도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운전면허증 확인 △인도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를 펼쳤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동차 안전 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전주한옥마을이 전동차 사고 없는 안전한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4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광각

내야

전주매일 캠페인